

K-소비재 2030년 700억달러 목표 유통플랫폼 해외진출로 판 키운다

산업부·코트라, 해외진출 첫 시행 해외동반진출 '하이웨이' 구축 매년 13개 플랫폼 3년간 육성 온라인몰·물류·결제 '패키지' 지원 유통 최대 63억·역직구 11.3억 해외플랫폼 의존 줄여 판로 확대

정부가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유통플랫폼의 글로벌화를 본격 지원한다. 플랫폼과 입점 소비재 기업이 함께 해외로 나가는 '동반진출 하이웨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2일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유통망·역직구 플랫폼의 글로벌화를 위해 3년간 매년 471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내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국내 유통플랫폼을 '글로벌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해외 매장 개설을 넘어, 해외 소비자 대상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물류·결제 인프라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K-소비

재 수출은 2025년 46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도약기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K-소비재 기업의 온라인 수출은 아마존(Amazon), C-커머스(알리·테무·위인)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해외 플랫폼은 그러나 글로벌 접근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입점 수수료와 가격 협상력, 고객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국내 일부 선도 유통기업도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 부담과 현지 경험 부족 등으로 중국·일본 등 인접 시장 중심의 제한적 진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유통 플랫폼이 현지에 안착하려면 시장 이해는 물론, 수출 물류체계 확보와 결제 시스템 구축까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와 코트라는 향후 3년간 매년 13개(유통 8개, 역직구 5개)의 플랫폼을 선정해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유통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63억 원(자부담 30%), 역직구 플랫폼에는 기업당 최대 11.3억 원(자부담 30%)을 지원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해

외 마케팅, 물류, 인증, 광고·홍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타깃 지역의 통관·관세 제도 및 시장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도 병행한다.

특히 역직구 플랫폼은 K-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성장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또는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현지 바이어 발굴 없이도 빠르게 수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 한국 제품 역직구 규모는 29억 달러로 4년 만에 2.6배 성장했다. 정부는 해외결제·물류 기능을 포함한 글로벌 전용몰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마케팅과 물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외시장에서 K-소비재 인기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K-유통 플랫폼'의 수출 역량을 높여 통째로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통해 유통 서비스와 소비재 수출을 동시에 늘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농기계화 실행력 높인다

민관 협업 설명회 순회

정부가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 중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 생산성 제고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추진방향 관련 해, 이달 하순 각 지방 순회를 통해 융자사업·운영방안 등의 정보 공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충남 천안(2월24일), 대구(2월25일), 전남 나주(2월26일) 등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방정부 담당자와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기계화 정책방향 ▲농업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을 위한 정부융자사업 ▲농업기계 검정 및 사후검정 절차 ▲농업기계 신고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정부융자 지원과 검정 제도 개선사항이 공유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 스마트 농업기계 확산 등 구조적 과제 대응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본청에 설치된 생성형 AI '이삭이·새싹이' 모형물.

/뉴스IS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현장형 AI 서비스 확대

농진청, AI 행동계획 농업 후속조치 데이터 통합... 전주기 관리체계

농촌진흥청이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첨단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농업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종전에 데이터 기능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었다. 이번에 '농업지능데이터팀'으로 통합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농업 과학 기술

의 AI 대전환을 목표로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현장 체감형 AI 서비스를 확대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AI 새싹이'를 도입해 실험 설계 자동화 등 연구 전주기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재배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융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민간 클라우드와 분석 기반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주도한다. 지능형 의사결정도 지원한다. 시설 및 노지 현장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농업인이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50년 미해결 고준위 방폐물 해법 논의 착수

고준위관리위원회 첫 회의 열어

국내 원전 역사 50여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본격 가동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첫 개최되는 공식 회의다. 원전 가동 이후 5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본격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위원회는 심의·의결 안건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처리한다. 운영세칙은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회의 소집 절차, 안건 제출·상정 및 의결 방식,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방안 등 회의 운영의 세부 기준을 담았다.

이어 위원회는 사무처로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한다.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의 부지선정 전 과정을 담은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도 점검한다. 해당 계획은 특별법 제20조와 2021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 근거한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 조사계획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부지적합성 조사를 수행해,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최적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한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노후 연안선박 교체 지원 본격화

펀드·금융·자부담 결합 방식

해양수산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1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며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됐으며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 중이다.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운항을 개시했다.

앞서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난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 증가를 감안해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2.5배 상향했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 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김해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건조 비용 상승 등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상향했다"며 "더 많은 선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남부발전, 부산과학관과 과학교육 협력

부산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MOU

한국남부발전이 국립부산과학관과 손잡고 지역 과학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20일 국립부산과학관과 지역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지역 청소년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국립부산과학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지역 성장을 견인할 미래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청소년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대상 과학문화 확산 사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향후 5년간 총 1억5000만 원을 국립부산과학관에 후원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발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오른쪽)과 송삼중 국립부산과학관장이 지난 20일 지역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전·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등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과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부산지역 교육여건을 향상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